| | 보 도 자 료 | |
|---|---|---|
| | 작성 |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(044-960-0207) |
| | 배포 |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044-960-0443)<br>홍보출판팀 박순업 팀장(044-960-0428) |
| 보도일시 | ■ 즉시 보도 가능 | |

## "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"

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878호

□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**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**이다.

○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,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

-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: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, 세출은 중앙 대 지방(지방교육 포함)이 대략 40 :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

□ 이에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**『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』**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.

○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**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,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**가 제기

○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, 포괄보조금 도입,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, **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,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**

○ 한편, **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**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,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,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**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**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

□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, **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**하다고 평가하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.

○ **(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)**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,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,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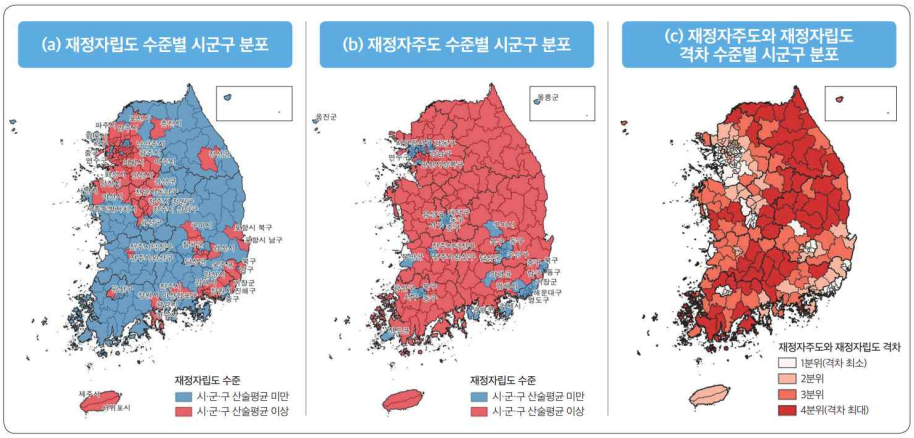
○ **(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)**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,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,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,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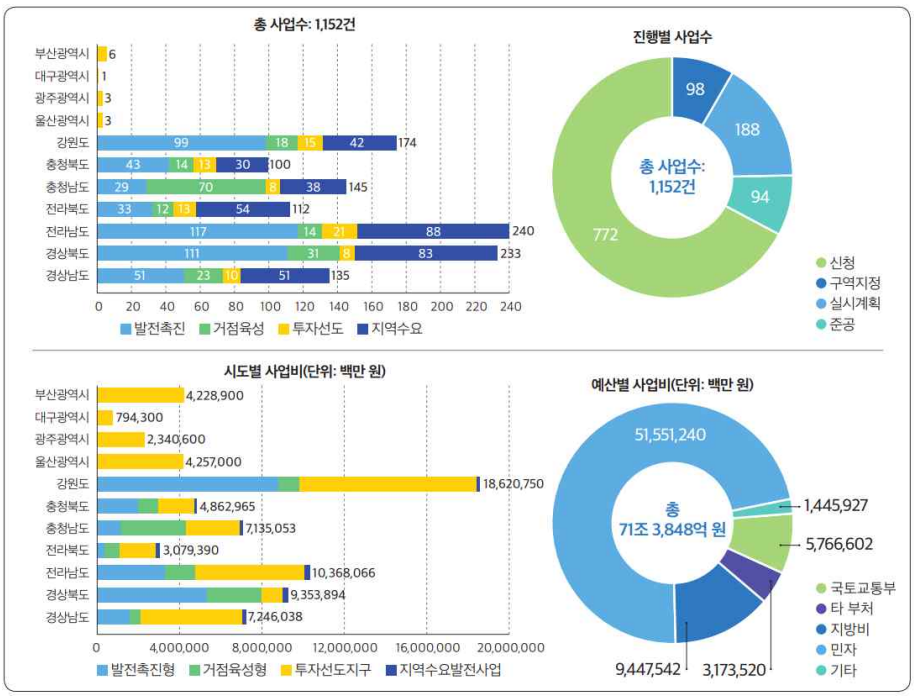
## [참고]

그림 4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 수준별 시군구 분포(2020년 기준)




주: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값의 크기와 비교하여 시군구의 상대적 재정 수준을 분석.
출처: 통계청 시군구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그림 5 재정자립도·재정자주도 수준별 시군구 분포(2020년 기준)




출처: http://rdims.lh.or.kr 내부자료 (2021년 5월 6일 검색).